

## 「비전 동서남북」

# ‘남북의 시간’은 그냥 오지 않는다



**이성재**  
인천자유평화연대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얼마 전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제 ‘남북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남북의 시간’은 그냥 다가오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의지와 지혜로 만들어가야 한다.

당선자를 확정짓지 못하는 혼란 시기를 겪고 있는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반도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것은 맞다. 당선되더라도 인선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리고, 내부 문제 또한 만만치 않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8만명, 사망자가 2000명을 넘는 코로나19 방역 문제, 1000만명이 넘어서는 실업자 등 경제 문제, 격화된 인종차별 문제 등에 정신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는 전제가

있다. 바로 남이 북과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주체적으로 헤쳐 나가겠다는 담대함을 갖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인도적인 지원마저 다시 복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유엔 사탕, 미국 탕만 할 수 없다. ‘한미워킹그룹’도 ‘동맹대화’도 먼저 제한한 것이 우리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었겠지만 돌아켜보면 잘못된 방향이었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박근혜가 전자권 전환방식을 ‘시기’에서 ‘조건’으로 바꾼 것을 그대로 수용해 조건 충족에 매달리면서 남북관계 복원도 물건너갔다. 전자권 환수와 남북관계 복원이라는, ‘개도 구력도 다 잃는 꼴’이었다.

‘남북의 시간’이 온 것은 맞지만 그간의 좌절에 대한 복기와 새로운 방향실점이 먼저다. ‘종전선언’을 남북관계의 돌파구 카드로 내밀며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국방부장관 등 고위관계자들이 미 대선 직전까지 미국을 찾았지만, 체면만 구했다. “비핵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사실상 거부당했다. 북으로부터는 굴종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는 ‘남북관계에서 자율성을 갖지 않으면 남북관계 복원은 어렵다’는 북의 메시지’로 봐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시간은 이제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 하반기면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 길어 봐야 8개월이다. 이 길지 않은 시간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남북관계 급변 원인이었던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안이 90일 안건조정소위 기간을 거쳐 12월 초 의통위에 상정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로 남북정상선언도 비준 처리해야 한다.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함이다. 그러면 9·19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 사업,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전염병 유입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 협력, 인도적인 이산가족 상봉 등 합의 이행을 위해 실제 행동에 나서는데 명분과 힘이 실린다.

세 번째로 2021년 한미연합훈련 연기 방침 천명이다. 신뢰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세에 의존해 군

사대결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지난 2018년 평화의 봄이 열렸던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 17일, 미국 NBC와 인터뷰에서 “평창올림픽이 열리기 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부터였다. 전자권 환수를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9·19공동선언에서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고 우리가 매달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지난 시기 남측이 인도적 지원과 보건의료 협력 의사를 피력했음에도 북의 반응이 거의 없었던 것은 또 다시 미국에 의존하는 문재인정부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신뢰회복을 위한 이러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한다면 조만간 남북관계는 다시 복원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신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의료적으로 취약해 거의 국경 폐쇄 수준으로 대처하는 북의 입장에서 남과의 교류와 접촉이 조심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다. 먼저 행동하고 기다려야 한다. 당장이야 남북 모두 코로나19 방역이 최우선 아닌가.

# “남북역사문화 교류, 다음은 황해도다”

경기도박물관 ‘북한문화유산·한국사인식 학술회의’  
고구려·고려 문화 다수-북 국보 등 21% 소재  
“정부차원 체계적 관리·보존 시스템 구축해야”

고려 궁궐 회경전, 선경전으로 명칭 변경 논의도

역사문화 전문가들이 남북역사문화 교류사업의 대상지로 개성, 평양에 이어 황해도를 주목하고 있다. ‘금강산 신계사 대웅전지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 등에 이은 다음 공동발굴조사의 대상지는 우수한 고구려와 고려의 문화적 유산이 다수 남아있는 황해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경기도박물관은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고려사학회와 함께 ‘북한의 문화유산과 한국사 인식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황해도의 문화 유산 보존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실제 황해도에는 국보유적 40개, 준국보 유적 380개(2009년 기준) 등 북한 국보와 준국보의 평균 21%가 소재해 있다.

황해도의 문화재와 문화유산 관련, 첫 기초 연설을 맡은 홍영의 국민대 교수는 “남북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교류 사업에서 개성과 평양 이외의 지역을 주목한다면 다음은 황해도가 되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우리의 민족공동자산인 북한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안정적 교류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북한문화재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상교통로 및 교류 관련 유적에 대한 학술조사와 발굴, 답사를 비롯해 황해도 지역을 주요 기반으로 했던 은을탈출이나 봉산탈출 등 인적 자원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며 “남북 역사유적 공동연구를 재개하고 발굴조사와 관광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은 13일 박물관에서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고려사학회와 ‘북한의 문화유산과 한국사 인식’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최근까지 일본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황해도 원산리 가마터를 중심으로 해주가마나 해령가마 등 황해도 지역의 청자문화의 연구도 주목됐다. 또 파주에 남아 있는 율곡이이 묘소와 율곡이이의 문인들에 의해 건립된 서원들을 남북공동사업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안에도 검토됐다.

이날 고려 궁궐 ‘회경전’을 ‘선경전’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승연 경기도박물관 학예사는 양정석 수원대 교수가 발표한 ‘고려궁궐 회경전 일곽의 VR복원 과정에서의 이미지 변화와 활용’과 관련, “고려사에서 인종 16년 모든 전(殿), 각(閣) 및 궁(宮), 문(門)의 이름을 고칠 때 회경전은 선경전으로 고쳤다는 기록이 있다”며 “논고에서 다루는 회경전은 그 전각명이 지나는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마지막에 존속했던 유구를 대상으로 한 복원이기에 회경전 이 아닌 선경전으로 지칭해야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양 교수는 “복원을 시작할 때 회경전이었지만 사료 분석을 통해 끝날 때는 선경전이 있기 때문에 선경전으로

지칭 변경을 하는 것이 맞다”며 “회경전의 원래 모습은 알 수 없는 상태고 평면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건물이 선경전이기에 때문에 선경전으로 지칭 변경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문화재 조사와 원형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북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북한은 과학적 장비와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문화재 관련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자 부족과 관련 교육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고려박물관처럼 지역의 중요 유적과 기념물 주변으로 인근의 유물, 유적을 모아두게 되면 좁은 공간에서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으나 유적의 경우 본래 자리했던 곳의 원형에 대한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글: 사민-박재원 기자 hama@incheonilbo.com